

4대강 살리기도 지역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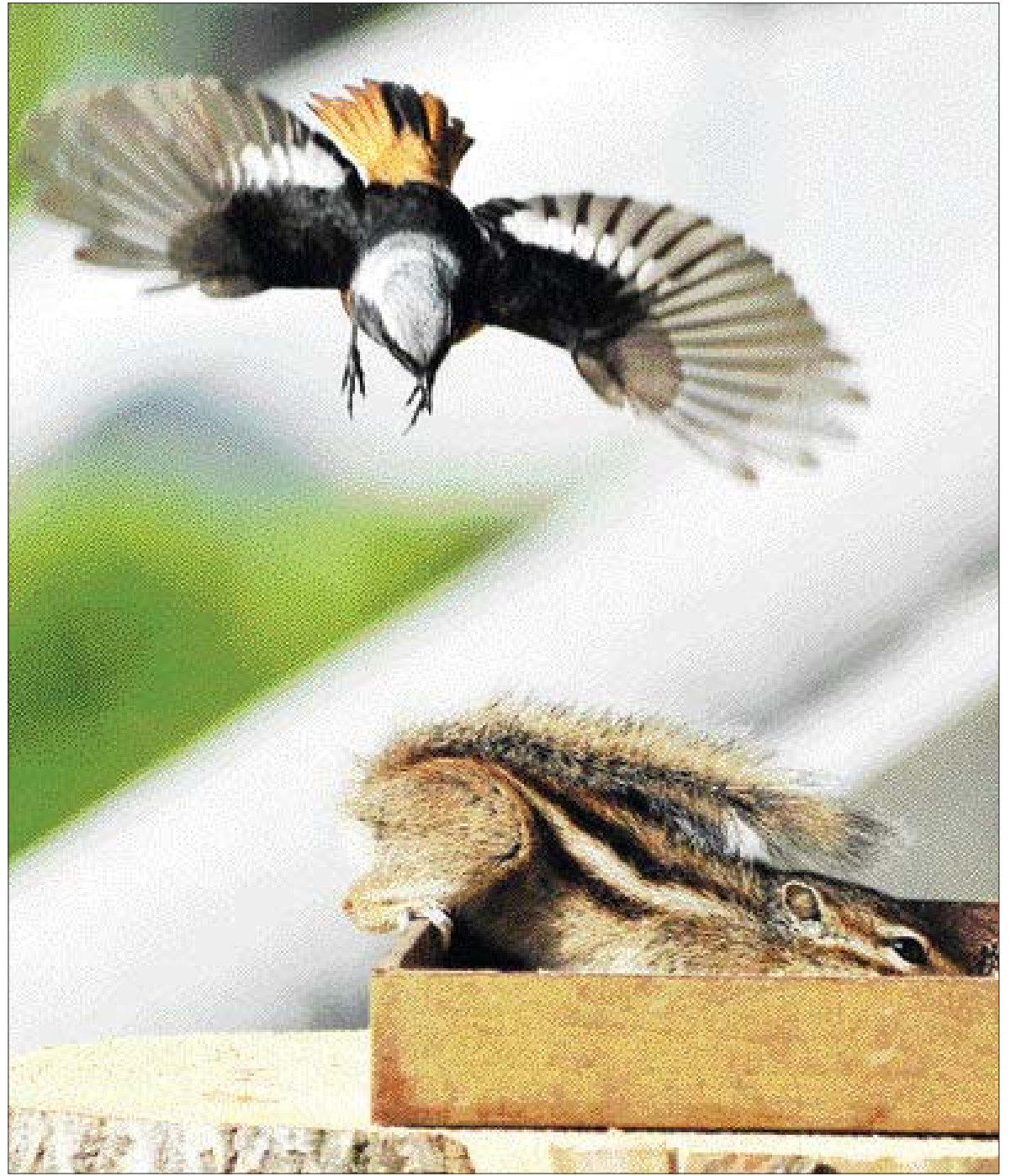
영산강 준설 규모 낙동강 20분의 1 불과 하구둑 통선갑문 없어 뱃길 복원 불가능

영산강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영산강은 하상 퇴적토 준설규모가 미흡해 홍수방지와 수질개선, 생활용수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영산강과 다도해 간 뱃길을 복원하는데 필수적인 영산강 하구둑 통선갑문 확대사업도 제외돼 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영산강 뱃길복원을 주장하는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

회)는 6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퇴적토 준설 규모를 축소하고 통선갑문 확대사업을 제외하는 등 나머지 대상보다 사업규모를 크게 줄여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퇴적토 준설량의 경우 낙동강은 4억2천만㎡인데 비해 영산강은 2천만㎡에 그쳐, 준설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영산강 예상 수심은 2.5m에 불과하다"며 "정부 발표처럼 영산강~다도해간 크루즈선이 운항할 수 있으려면 수심이 5m는 되어야 하는 만큼, 현재의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영산강 뱃길

복원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당초 전남도 계획에서는 영산강 하구둑 통선갑문의 너비를 6m에서 60m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이번 정부계획에서는 통선갑문 확대사업이 제외됐다"며 "이는 사실상 뱃길을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만큼, 정부의 최종 마스터플랜에 반드시 퇴적토 준설량 확대와 통선갑문 설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영산강 수질악화의 원인으로 광주시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등을 들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함께 적극적인 퇴적토 준설이

없으면 수질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수조절과 수량확보를 위한 사업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낙동강에는 2개의 다목적 댐이 들어서는 반면 영산강에는 2개의 보 설치 계획만 포함됐다. 전남이 대표적인 농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량확보를 위한 저수지 제방 높임 사업대상 또한 낙동강은 37곳이지만 영산강은 12곳에 불과하다.
김창원 협의회장은 "홍수조절용 다목적댐이 하나도 없는 영산강의 퇴적토 준설량이 낙동강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지역차별"이라며 "4대강 중 영산강이 모든 면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7일 오전과 오후 광주와 나주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지역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홍영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새끼 지키려 온몸 던지는 딱새
6일 오후 화순군 남면 양림원 농장의 나무 통치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딱새가 자신의 알을 노리는 다람쥐를 쫓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가족간 정이 새삼 그리워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알을 지키려는 수컷 딱새의 몸부림이 애뜻하다. <양림원 제공>

정부 '새 주소사업' 줄속...도로명판 등 무더기 교체

광주·전남 20만개 바꿔야 할 판

주민 혼란에 예산 낭비

정부의 '새 주소사업'이 시행 2년 만에 변경되는 등 줄속 추진돼 광주·전남 지자체가 기존 설치한 도로명판과 안내판 20여만개를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때문에 주민 혼란은 물론 예산 수억원을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광주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 시행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일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현재 광주시 12만2천566개, 전남도 7만9천979개 등 모두 20만2천545개 도로명판·안내판을 교체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시·도,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행안부가 각각 도로명을 정해 통일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광주시 상무로의 경우 광산구 송정리1교~양동교까지는 '상무로', 상록회관 앞~양동교까지는 '양동로'로 달리 부르고 있지만, 법 개정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해야 한다.

건물번호 부여 방식도 변경된다. 문제는 가뜰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로명판과 안내판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 50%, 기초자치단체 35%, 광역자치단체가 15%씩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 시·도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의심 받게 됐다.
지난 1997년 정부의 '새 주소사업 지침'에 따라 번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고 안내판을 설치했지만 제도 정착단계에서 기존 안내판 등

을 대거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도는 새로운 도로명을 짓고 새 이름에 대한 주민 공람·고시·고지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애초에는 새 주소를 법정 주소가 아닌 생활주소로 쓰려고 했지만 2007년에 관련법을 제정한 뒤 이 주소를 법정주소로 쓰자는 쪽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법개정과 내용을 지난 2008년 지자체들에 통보했기 때문에 줄속 추진된 사업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연차 로비 의혹 국세청 압수수색 권양숙 여사 금명 재소환 조사키로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과 관련,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및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4면)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은 작년 하반기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실과 3과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박 회장 관련 세무조사·금융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당시 조사4국장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조사4국 3과 1계장었던 서초세무서장, 조사4국 3과 1계장이었던 동울산세무서장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국세청에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작년 7월30일부터 박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그가 세종증권·휴먼스 주식 차명 거래해 차익을 얻고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배당이익을 받은 뒤 200억원 이상 세금을 포함한 사실을 확인, 작년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1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해 조사한 뒤 다음 주 중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남스

